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방치하고 연금 개혁 가능한가

세계일보 오피니언

국민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차 국민 재정추계를 애초 3월에서 두 달가량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기초연금과 연계된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이 노후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이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직역연금은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지 오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올해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학연금도 2049년쯤 바닥날 전망이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01년 기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매월 수입의 18% (국민연금 9%)를 내는데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에 불과한데 수령액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연금만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하면 국민 저항이 커질 게 뻔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혹은 통합 논의를 공론장에 올려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연금 개혁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연금수급연령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개혁안을 올해 여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은 연금개혁의 원년”이라며 5년 만에 재차 개혁에 나섰다.

일본은 이미 8년 전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9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대적 과제로 더 미룰 수 없다. 개혁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보험료 현실화와 수급연령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역대 정부도 이런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소모적 갈등과 정쟁만 야기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실행에 나설 때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 자료와 방향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개혁안을 흔들어진 안 된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치밀한 전략과 시간표를 짜야 한다. 개혁안 논의과정을 낱알이 공개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개혁동력이 생기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근거 자료가 되는 5차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이달로 당기기로 했다. 2013년 3차 재정추계에선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18년 4차 추계에선 이 시기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최근 저출산 흐름을 감안하면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생존 과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해 말 복지부는 현 제도 유지를 포함한 네 가지의 방안을 국회에 떠넘기듯 제출했고, 연금개혁은 그렇게 좌초하고 말았다.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실행 의지와 함께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든 노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9월 중앙일보 창간 57주년 여론조사의 국민연금개혁 관련 질문에는 ▶현행 유지(43.0%) ▶수급 연령 상향(25.2%) ▶보험료를 인상(12.6%) ▶연금 수령액 축소(10.1%)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면 반대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을 설득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야당도 연금개혁을 마냥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수권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출처:세계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방위 대응으로 결실얻어야

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월 6일 발의와 동시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36명, 더불어민주당 5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우호적 분위기는 조성됐습니다.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에 참여한 데다가 논쟁이 될만한 조항은 줄였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 심사는 원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시급한 현안이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와 폐광지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군사규제지역에서 민군복합단지 조성 우선 및 민간인통제선·제한보호구역 거리를 완화해 지정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가가 우선 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석으로 취급돼온 경석을 광물자원으로 인정해 에너지산업으로 이어지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형 과학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 및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원도 면적의 대부분인 산림과 농지는 물론 국방과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보호 규제 조치 관련 결정 권한을 중앙부처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과 강원도는 초당적이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범주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와 산림, 환경, 국방분야는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일방향적인 걸림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하게 유지 관리해온 산림과 환경은 관광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직 대체 신산업이 뚜렷하지 않은 점경지 시군에서는 군부대 규모 정도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국가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내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년층 역시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 등에서 결실을 본 의료정밀기기 및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책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장관에서 강원도지사로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도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해야 하는 만큼 강원도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총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 누림 11만 원 지원 -
- 하반기엔 민간 앱 연계해 간편결제, 잔액 및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도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 아울러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 박보균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깃발은 ‘자유와 연대’이고 연대의 한 축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약자와의 동행’이다.”라며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해왔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 전국 2만 7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을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2. 1.~11. 30.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수)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2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민간협업 이용자 편의 증진
-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 미수혜자 선제적 발굴을 위한 권리구제서비스 강화
-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협업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29만 1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84,330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이는 '21년 2만 9천여 명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권리구제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 누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차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가 문화로 일상의 행복감과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의원들, 직무교육에 관심 높았다... 정원 대비 2배 이상 신청

-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 실시 -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교육에 정원 40명보다 2배 이상인 83명의 지방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1월 26(목)부터 1월 27일(금)까지 2일간, 전북 완주에서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1기 지방의원 기본과정」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등을 대비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과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대외적 발표(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교육에는 당초 교육 정원(40명)의 2배가 넘는 83명의 지방의원이 등록·신청했으며, 특히,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 함양이 중요한 초·재선의원(초선 59명, 재선 21명)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험 많은 전직 의원 위주 강사진 섭외, 실무적·실용적 교과 구성, 회기를 고려한 적시성 있는 교육 등으로 지방의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류임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의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열의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의 역량 개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위택스·이택스)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진 -

- 빠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대행 신고·납부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위택스’를 구축·운영해 왔다.
 -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2001년 이택스를 개발, 이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구광역 시도 자체 이택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등 납세관리인 외에 일반인도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위택스 시스템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와는 달리 위임장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 또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 법무사 등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해야 했다.
 -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는 위임장 첨부과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신고·납부 대행이 가능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서울특별시 등의 이택스도 지자체 민원창구의 신고·납부 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한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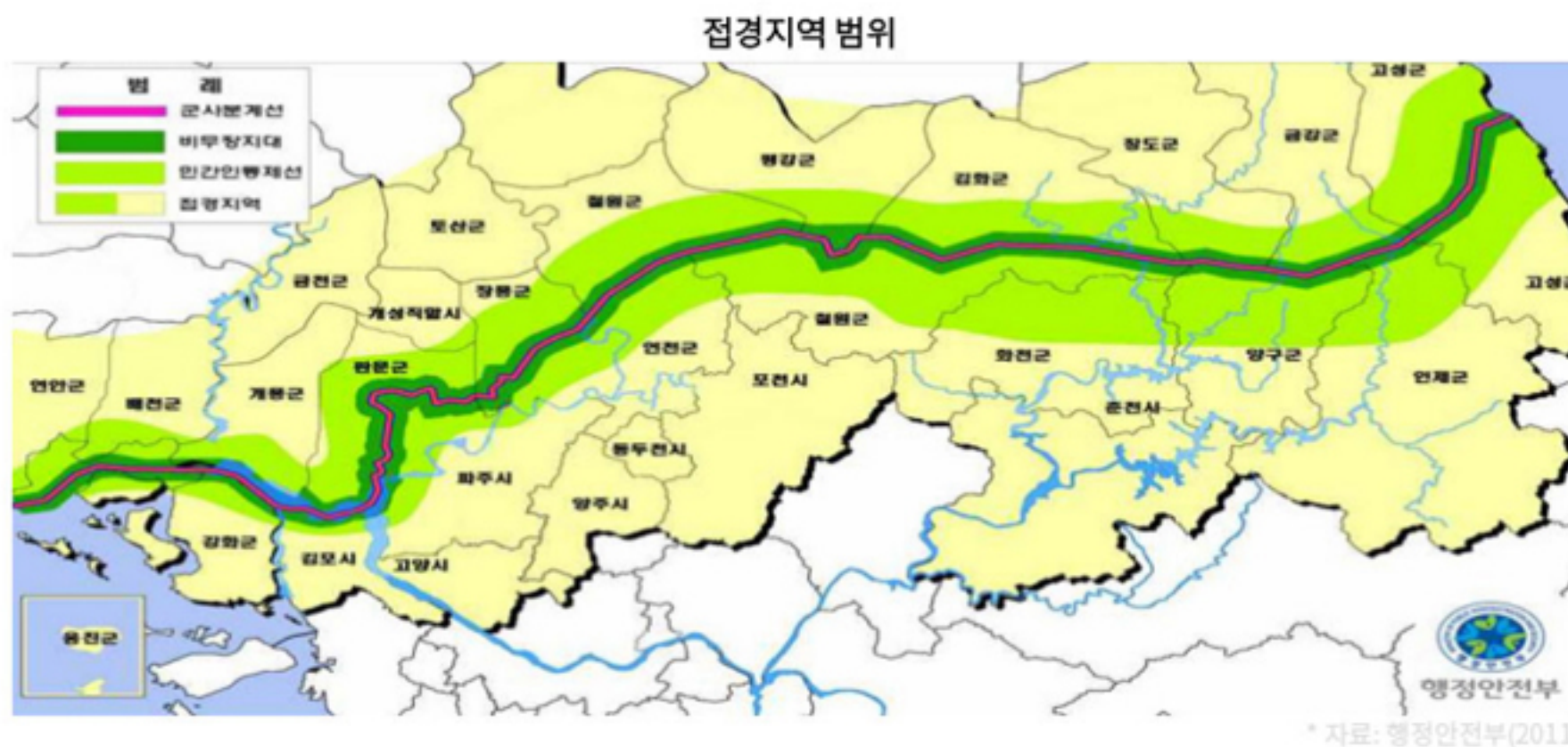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필요

접경지역이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의미
- 접경지역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5개 시·군이 해당



전국 인구의 5.8%가 거주하나 경제기반 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 저하

- 접경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5.8%가 거주하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접경지역에는 3,024,094명이 거주하며, 지난 11년간 (2010~2020) 인구가 연평균 2.3% 성장
- 전국에 비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낮고, 1·2차산업이 발달하여 3차산업 기반이 약함
 - 2019년 접경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2015년 기준년 가격)은 29.4백만원으로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82.1%수준
 - 같은 시기 접경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58.8%(전국 61.8%)로 전국에 비해 3차산업이 낮은 비중 차지
 - 반면 같은 시기 접경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비중 2.2%(전국 2.0%), 광·제조업 비중 29.2%(전국 28.8%), 건설업 비중 7.1%(전국 5.2%)로 전국에 비해 1·2차 산업이 발달

지역 특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접경지역 발전방안 수립 필요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지정된 사례가 없음
- 현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접경지역이라는 맥락만이 고려되어 시·군 간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안 수립이 필요

02. 접경지역 권역별 특성 분석

지역 특성에 따라 접경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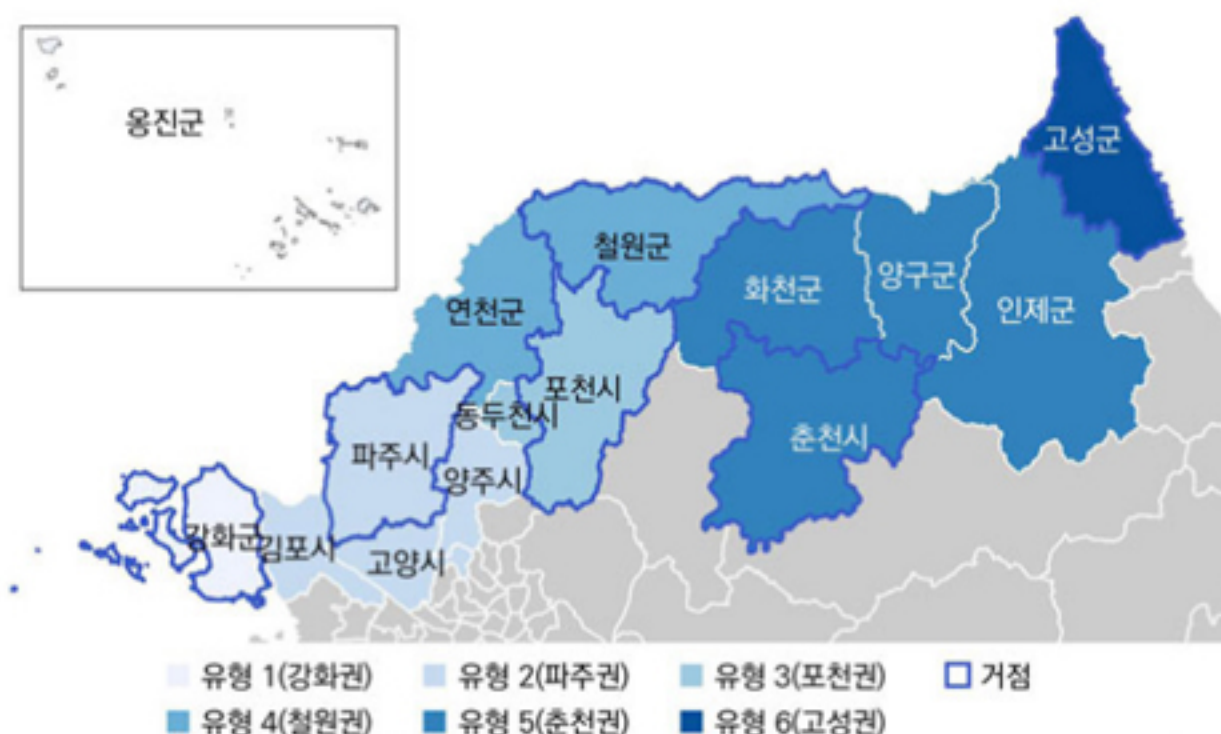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건, 통계자료 여부,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을 분석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에 네 가지 요인이 기술되어 있음
- 지정 요건 관련 키워드를 종합하여 '인구', '경제', '교통·접근성' 부문별 분석지표를 구축

지정 요건	키워드
•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
•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남북한 교류
•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중심축, 교통
•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거점, 생활권, 인구

-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통해 23개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특성이 유사한 시·군을 묶어 접경지역을 6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다른 시·군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6개 권역으로 재구성

접경지역 권역 구분(안)



6개 권역별 인구, 경제, 교통·접근성 특성 분석

- **강화권은 산업기반이 약하며, 도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열악**
 - 2019년 강화권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비중(5.4%), 공공행정 국방 비중(21.8%)이 접경지역 전체에 비해 큼
 - 2021년 강화권 고속도로 IC 접근성은 37.9km로 접경지역 중 가장 열악함
- **파주권은 접경지역 중 인구, 경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며, 교통 접근성도 가장 우수**
 - 최근 4년간(2018~2021년) 파주권 인구는 연평균 2.3% 성장하여 접경지역중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음
 - 같은 기간 파주권 사업체 수는 연평균 4.9% 증가하여 접경지역 중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높음
 - 2021년 파주권 고속도로 IC접근성은 8.1km로,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은 24.8km로 접경지역 중 가장 우수함
- **포천권은 접경지역 중 경제 성장세가 가장 약하나, 광·제조업, 관광업이 발달**
 - 최근 4년간(2018~2021년) 포천권 사업체 수는 연평균 2.1% 종사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하여 접경지역 중 성장세가 가장 약함
 - 2019년 포천권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광·제조업 비중(35.8%), 관광업 비중(7.0%)이 접경지역 전체에 비해 큼
- **철원권은 접경지역 중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강하며, 사업기반이 약하고 도로 인프라가 부족**
 - 최근 4년간(2018~2021년) 철원군의 인구는 연평균 1.9% 감소하여 접경지역중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큼
 - 2019년 철원권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비중(9.3%), 공공행정국방 비중(49.7%)이 접경지역 전체에 비해 큼
 - 2021년 철원권 도로 포장률은 73.9%로 접경지역 중 도로 포장률이 가장 낮음
- **춘천권은 관광업이 발달했으며, 강원도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열악**
 - 2019년 춘천권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비중(3.4%), 관광업 비중(8.0%)이 접경지역 전체에 비해 큼
 - 2021년 춘천권 고속도로 IC 접근성은 21.8km,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은 87.1km로 접경지역중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편에 속함
- **고성군은 접경지역 중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최근 관광업이 성장**
 - 최근 4년간(2016~2019년) 고성권 사업체 수는 연평균 3.1%, 종사자 수는 연평균 8.6% 증가하여 접경지역 중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짐
 - 2019년 고성권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관광업 비중(10.9%)이 접경지역 전체에 비해 크며, 최근 4년간(2016~2019년) 관광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2.7%성장함

03.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 방안 수립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권역별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색이 반영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권역	특성	발전방안
강화권(강화군, 옹진군)	-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업 등이 발달하여 2·3차산업 기반이 약함 - 도서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함	- 서해 NLL 지역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를 구상 - 도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서해 갯벌·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생태관광 거점을 조성
파주권(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 접경지역 중 인구, 경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짐 - 접경지역 중 교통 접근성도 가장 우수함	- 신산업 경제특구 육성으로 산업·물류 거점화를 추진 - 산업형 남북교류발전지구 조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경의축메가리전을 실현
포천시(동두천시, 포천시)	- 접경지역 중 경제 성장세가 가장 약함 - 광·제조업, 관광업 등의 산업이 발달함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생태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 - 영상 촬영지를 연계하여 K-영상촬영지구를 조성
철원군(연천군, 철원군)	- 접경지역 중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강함 -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업 등이 발달하여 2·3차산업 기반이 약함 - 도로 인프라가 부족함	- 강원축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 연계형 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 - 한탄강 유역 생태자원을 대상으로 남북 공동 관리 체계 구축
춘천권(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농림어업, 관광업 등의 산업이 발달함 - 강원도 군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함	- 수변공원, 수상레포츠, 자원을 활용하여 삼각관광벨트를 육성 - 다양한 생태자원, 전적·안보자원을 활요하여 DMZ평화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
고성권(고성군)	- 접경지역 중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짐 - 최근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음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동해평화협력특별지구를 구상 - 한동해권 해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관광거점을 조성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지원필요

-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성장 잠재력이 있고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을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절차, 접경특화발전지구계획 수립 절차 등을 지역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당장 버려야 할 불필요한 일은?



인사혁신처

이렇게 바뀌요 >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 불필요한 일 버리기

핵심메시지로 말해요



이렇게 바뀌요! 요점은 어디에..?! 핵심메시지로 분명하게!



#조직문화 바꾸기 10대 과제 - 불필요한 일 버리기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